

감사원 중립성·靑 캐비닛 문건 공개 공방

법사위 회의 수리온 감사 결과 놓고...한국당 “독립성 상실” 황찬현 “정권과 상관 없어”...박상기 법무 청문보고서 채택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느냐”고 황찬현 감사원장을 몰아세웠다. 여야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적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실시한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난 정권이 (수리온 개발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느냐”며 “지휘관들은 수리온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안 타고 밑에 애들한테 타라고 한다. 지휘관들을 태워서 시범 운전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정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감사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사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사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

서는 6월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4대강 사업 이후 홍수로 인한 예산 투입이 줄었고, 가뭄도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을 (다시)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통령 지시로 감사를 결정해서 감사의 독립성은 없어졌다”고 했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공개한 뒤 특검에 전달한 것을 두고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금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며 “범죄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히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해빙무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오른쪽),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한·중, 한·일 외교장관 만난다

6~8일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북핵·사드·위안부 등 논의

정부는 내달 초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8월 6~8일, 필리핀 마닐라)를 계기로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RF에는 한중일 뿐 아니라 미국·러시아에 북한까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초 중국,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처음 정식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과 7일 독일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논의

의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사이의 회담이 열린다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그에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강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개최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양국 정상이 재개기로 합의한 서둘러 외교(한일 정상)이 수시로 양국 수도를 왕래하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추진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능후 野 송곳검증에 ‘진땀’

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한국당 “인사원칙 4가지 위배”

18일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정 책보다 도덕성 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 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 원도 “위장전입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공직선거법 위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시정 안 했을 것 같다”고 답하

면서 진땀을 흘렸다.

박 후보자는 이날 부인 이모 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에 위장전입 및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이 지적된 것을 두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사과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 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불발... 오늘 재시도

공무원 증원·물관리 일원화 평행선...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모색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이 불참하면 오늘 본회의 속개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 열린 본회의 상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부 소위원회 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뒤 의원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갔으나 협상을 진

척을 보지 못했다. 결국, 한국당이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대기 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추경안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삭감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80억원 삭감 방침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무원 채용 예산이라며 추경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삭감 의견을 받아들이고 본예산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공무원 증원 자재에 예산이 사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를 계속했다. 또 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된 부분만 일단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그럴 경우 물관리 일원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 반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33개 법안 등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19대 대선 선거보전액 3黨 1240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000여만원 등 모두 1240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득표율 41.1%)과 자유한국당(24.0%), 국민의당(21.4%) 등 3개 정당에 국한됐다. 이들 3개 정당은 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 원을 돌려받았다 고 중앙선거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후

보자의 득표율이 10%에도 못 미친 바른정당(6.8%)과 정의당(6.2%)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중앙선거위는 선거비용 보전 실시를 편성해 50여일 동안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총 481억 6635만원을 보전 청구해 9억9423만원이 감액된 471억7211만 원을 보전받았다. 한국당은 청구액 341억9713만원 중 330억6466만원을, 국민의당은 청구액 427억8088만원 중 422억6341만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모텔 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수준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용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무인텔

엘도라도 리조트 콘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3동), 객실 52개
- 리모델링후 연 순수익 3억 이상 가능
- 온천지구 내 “직업테마파크”등 600억 투자 예정
- 시세/감정가 - 60억
- 매매 - 42억
- 상담문의
H.010-6838-1230